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관련시설을 안전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마. 각급학교의 장에게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답사의 실시와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정함(안 제16조).

아. 각급학교의 장이 현장체험학습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자. 현장체험학습 실시 이후 각급학교의 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soluck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기념일교육”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시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념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념일교육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사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금액·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점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안전우수기관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법률,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3. 학교장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전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안전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우수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안전우수기관 인증의 운영 및 인증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와 시설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 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솔교사 외에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소속 학교 교사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①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자 중 한 명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지

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등을 학교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부모 등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 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

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
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

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삭제

- 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 지정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서 정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관련 예산 지급
- 관련 조문
 -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각급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의 횟수, 규모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이 상이함으로 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안전요원 활동비를 1교 1인(2박3일, 1일 150천원)배치 기준으로 추계함
 - 최저임금인상률 8.1% 반영하여 추계
- ※ 향후 안전요원 활동비 단가 인상 및 배치 기준 변동에 따른 추계치는 변동 될 수 있음
- ※ 2016년 6월 현재 수학여행 안전요원 활동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 중임

나. 추계 결과 : 804,147천원 /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학생생활교육과 박선영(☎480-7611)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법정자격대상자 및 중위소득 52% 이하의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자율형 사립고, 외고, 과학고의 사회통합전형자 중 기회균등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관련 조문

- 제5조(현장체험학습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금액·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의 ①항의 3-5호가 검토의견서에 명시한 사유에 의하여 삭제된다는 전제
- 법정자격대상자 및 중위소득 52% 이하의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2016년도 예산편성 인원(18,858명)을 기준으로 산정
- 자율형 사립고, 외고, 과학고의 사회통합전형자 중 기회균등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2016년도 예산편성 인원(366명)을 기준으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9,115,900천원 /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재정과 신성희(☎480-7547)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959,980	1,971,060	1,983,038	1,995,986	2,009,983	9,920,047
자체수입		1,959,980	1,971,060	12,983,038	1,995,986	2,009,983	9,920,047
세 출		1,959,980	1,971,060	1,983,038	1,995,986	2,009,983	9,920,047
안전요원인건비		136,800	147,880	159,858	172,806	186,803	804,147
초·중·고 자녀 현장체험학습지원		1,663,098	1,663,098	1,663,098	1,663,098	1,663,098	8,315,49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60,082	160,082	160,082	160,082	160,082	800,41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